■韓銀 '지준율' 카드 왜 꺼냈나

'집 값 잡기'…타깃은 주택 대출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가 23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지급준비율 인상배경을 기자들에게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유동성 흡수, 단기자금 장기화 유도

한국은행이 사문화돼 있다시피한 지급준비율 인상 카드를 16년만엔 다시 꺼낸 것은 콜금리 인상을 피하면서 시중유동성을 흡수, 부동산시장 안정을 측면에서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준율 인상 자체의 시장 파급효과는 제쳐놓더라도 중앙은행이 동원 가능한 수단을 통해 유동성 흡수에 나섰다는 점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시장에 강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는 판단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부동산 시장을 겨냥해 지준율을 인상했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과잉 유동성이 소비자물가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가운데 유독 부동산 시장만 달아오르게 하는 점을 감안하면 부동산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는 반박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한은은 콜금리 인상이 전국적으로 무차별하게 시장에 적용돼 경기 흐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집값 폭등으로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서도 이달 콜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학계, 시민단체 등은 통화정책 당국이 부동산 '광풍'에도 팔짱만 끼고 있는 것에 대해 못마땅한 시선을 계속 던졌고 한은도 나름대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찾느라 고심을 거듭해왔다.

일각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 의결 사항인 대출총량 규제의 시행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긴절한 경우'에 한해 쓸 수 있는 수단으로 한은법에 명시돼 있다. 한은 스스로 과연 지금이 그런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어서 대출총량 규제의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한 쪽으로 기울었다.

대신 그동안 거의 손대지 않던 지준율 카드를 꺼내 최근 수일동안 면밀히 검토를 거듭했다. 원화 예금의 지준율 조정이 이뤄졌던 것은 9년만에 처음이며 당시는 유동성 공급을 위해 지준율이 인하된 사례였다. 지준율 인상으로 시중유동성을 흡수하는 것은 1990년 이후 16년만에 처음이다.

한은은 이번에 수시입출식예금과 요구불예금의 지준율을 5%에서 7%로 인상하고 장기저축성예금의 지준율을 1%에서 0%로 낮춰 시중유동성을 어느 정도 흡수하면서 단기자금의 장기화를 유도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장필수기자 bungy@

"킹메이커는 60년대식 발상일 뿐"

손학규 '이회창 역할론' 부정적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23일 이회창 전 총재의 대선 역할론과 관련, "우리 정치에서 아직도 '킹메이커'를 말하는 것은 과거식 발상"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손 전 지사는 이날 SBS라디오 '김신명숙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면 60년대식 발상에서 정치를 보면 지금 정치현상을 볼 수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이 전 총재는 대통령은 못했지만 국가원로로서 이미 반열에 오른 분"이라며 "국가적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길을 함께 열어주는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젊은 부부가 집 한 채씩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발언에 대해선 "좋은 얘기이다. 신혼 부부에게 집 한 채씩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며 일단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연합뉴스

"北, 핵 포기할 것…대북제재 실패작"

40여회 방북한 박한식 교수

미국 내 대표적인 북한 전문가인 미국 조지아대 박한식(67) 교수는 23일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이 주도한 유엔 대북제재는 완전한 실패작"이라고 지적했으며 북한 학자로부터 이번 핵실험은작은 탄두에 얹을 수 있는 작은 폭탄을 성공적으로 터트렸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북한을 40여차례 방문한 박 교수는 이날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대상의 특별강연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이유 3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핵시설과 핵폭탄까지 다 포기해도 과학자는 있으며 원료는 있으니 그쪽 사람들 타산으로는 (핵포기를 한다해도) 대가가 결정적인 게 아니며', 둘째는 북의 핵실험으로 일본과 대만 등에서 핵경쟁이 일어나면 소량의 북한 핵무기는 우위를 상실하기 때문에 지금이 포기할 수 있는 적기라는 것이다. /연합뉴스

배기선, 징역 4년 '당선 무효형'

송영길 의원은 벌금 70만원 의원직 유지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사공영진 부장판사)는 23일 대구하계U대회 지원법 연장과 관련, 광고물업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배기선(56·경기 부천 원미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

배 의원은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3일 17대 총선에서 의정 보고서를 유권자들에게 돌린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야 의원 자격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확정 판결로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연합뉴스

현장과 시각

정계개편 앞둔 민주당 '집안싸움'

임동욱
서울 취재팀장

최근 정치권에서는 정계개편의 진앙지는 열린우리당이 아닌 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25 재보궐 선거 이후 전개된 정계개편 논의 과정에서 드러난 민주당의 무기력한 모습과 내부적으로 축적된 뿌리깊은 불신이 그 배경이다.

지난 21일 민주당 대표단 회의에서 제시된 '독자후보론'은 이러한 민주당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독자후보론은 먼저 민주당이 구심점을 갖고 정계개편을 주도한다는 것이다. 독자적인 대선 후보를 선출하고 이후 정계개편 과정에서 통합신당이 결성되면 경선을 통해 대선 후보를 선정하면 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독자후보론은 민주당 내부의 인적 구성을 고려할 때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운데다 치열한 내부 논의 없이 일부 당직자들에 의해 제기됐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한 대표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받고 있다.

여기에 지난 22일에는 민주당 정균환 부대표가 한화갑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볼썽 사나운 모습도 연출됐다. 정 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계개편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고 한 대표가 나의 당원 자격을 박탈하려 한다"며 "고건 전 총리를 견제하는 한 대표의 정계개편 구상은 결국 민주당을 죽음으로 내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정 부대표는 고건 전 총리를 내세워 당내 분란을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한 대표 측은 정 부대표가 중도세력 대통합의 명분으로 민주당의 운명을 고건 전 총리 측에 맡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이날 사태는 민주당 내부의 뿌리깊은 불신의 깊이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17대 총선 이후 민주당이 한 대표 체제로 운영되면서 원내외 인사들의 불만이 깊게 축적됐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를 방관적인 눈길로 바라보는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는 이를 반영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갈등이 조만간 무마될 것이며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당은 결국 정계개편의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50년 전통의 '민주세력 종갓집 정당'이라는 자부심도 있다.

그러나 수십 년 전통의 유명한 종갓집 식당도 음식의 맛과 서비스가 저하되면 결국 문을 닫는 것이 현실이다. 민주당은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 이를 뼈저리게 실감했었다.

지금 민주당에 요구되는 것은 지금까지의 내부 불신을 걷어내고 뼈를 깎은 내부 혁신과 과감한 외연 확대를 통한 새로운 정치 질서에 대한 비전 제시다. /tuim@kwangju.co.kr